

-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 은폐하려는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박은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31
----------	------

발의 연월일 : 2015. 4. 9.

발 의 자 : 박은경 의원(인)
외 20인

1. 주 문 : 불임과 같음

2. 제안이유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명확한 사실규명과 안전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이었으며,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의 어느 조직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서 구성과 운영에 대한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고자 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지난 3월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별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기획조정 실을 새롭게 만들어 '위원회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기능과 권한을 부여함으로 관제화 우려를 낳고 있음.
- 아울러 조직의 핵심업무를 해양수산부 등 조사 대상기관의 공직자들이 맡게 함으로써 특위를 장악하여 조사권마저 무력화하는 내용으로서 사실규명 자체를 저해하려는 의도로 생각할 수 밖에 없음.

- 또한 「동법 시행령안」 제5조(진상규명국) 조사1과의 분장사무 중 조사대상은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에 한정되어 있어 정부조사 결과나 자료의 오류를 확인하더라도 특위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 사실규명 활동의 어려움이 예상됨.
- 이 같이 불투명한 진상규명은 물론, 위원장과 소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 시켜 특위의 독립성이 훼손 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진상규명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예상되는 바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3. 참고사항

- 가. 결의안 통보처 : 대통령,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해양수산부장관
- 나. 결 의 안 : 불 임
- 다.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지난 3월 27일 해양수산부에서 입법예고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하며, 이에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행령안은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먼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통상 4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축소함으로써 정부안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120명의 사무처 인원을 90명으로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조사 대상기관 공무원들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사실규명의 대상에 대한 조사를 정부의 조사자료 분석만으로 갈음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특조위를 주도하려함은 물론, 참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지난 1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가족 대책위는 물론 수많은 국민과 단체들이 노력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진상규명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들의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제대로 된 사실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각 철회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안을 기초로 한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어 독립성을 보장하여 온 국민이 원하는 세월호 참사의 사실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세월호 참사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히면서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정부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시행령안을 전면 철회하라!

1. 정부는 명확한 사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안을 즉각 수용하라!

1. 정부는 세월호선체를 온전히 인양하여 실종자를 가족 품에 돌려달라!

2015년 4월 10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